한미 동맹의 미래 지향적 발전과 국방 개혁

□ 출처 : 21세기 동북아 미래포럼
□ 일시 : 2005년 7월 7일
□ 연사 : 윤광웅 국방부 장관
□ 주최 : 중앙일보, 현대경제연구원 공동

주제 발표

탈냉전 이후 국제정세 및 남북관계의 급변으로 국방의 패러다임 변화는 필연적임

우리 국방부는 지난 반세기 동안에 북한과 대치한 특수한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대내관계는 우리 군의 발전 속도보다도 훨씬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국방부가 좀 뒤쳐져 있다고 느끼고, 또 판단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떻든 간에 탈냉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국제테러와 대량 살상무기의 확산 문제가 심각한 위협으로 대두되면서 위협에 대한 대비 개념이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과학기술의 발전과 정보화 시대의 진입으로 무기체계의 발전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전쟁의 수행 개념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합동성, 무기 체계의 통합성, 그리고 군 안에 있어서의 협동성 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개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력의 신장과 함께 정치적인 민주화의 달성으로 국민적 자긍심이 고양되어 자주적 국방달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남북화해와 협력이 진전되면서 국민안보 의식이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군이 과거의 관성에 의존하는 기존의 국방 패러다임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그 때는 대내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미국은 1950년 이후에 월남전과 걸프전을 겪으

면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국민, 언론, 의회의 지지가 없이는 전쟁에서 승리를 다짐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 국방이 변하지 않으면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인식을 저희들이 계속 넓혀가고 있습니다.

변화의 핵심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국방 개혁을 새로운 차원에서 접근하고 제도적으로 추진하는 것

그 동안의 환경 여건에 부응하는 선진 국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패러다임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의 전략적 차원에서 국방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해서 우리 군은 우선 정부의 평화 번영 정책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한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을 통해서 서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와 선전수단 제거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한미간의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해서는 상호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 왔습니다. 또한 변화의 핵심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 국방 개혁을 새로운 차원에서 접근하고 제도적으로 추진해보자는 것입니다.

'한미 동맹의 미래 지향적 발전과 국방 개혁'은 국방 분야에서 참여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한미 동맹의 미래 지향적 발전과 국방 개혁의 추진'은 국방 분야 중에서 참여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개혁을 하고 있는 정부 부처 가운데 그래도 국방부의 개혁이 가장 구체적이고 성과를 내다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1. 한미 동맹의 현황과 전망

①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

한미 양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가치를 공유

한미 동맹에 대해서 좀더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한미 관계의 미래 지향적인 발전을 주요 안보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주변의 안보 환경을 고려할 때 당연한 논리적 귀결로 보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동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보 문제를 보는 시각도 비교적 원칙적으로는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한미 동맹관계와 연합 방위 체제에서 북한의 전쟁 도발을 효율적으로 억제하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의사소통이 잘 되고 또 의기가 투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참여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남북 교류협력도 한미 동맹이라는 강력한 뒷받침이 있기 때문에 어떤 안보에 관한 위협이 없이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동북아 지역 국가에 불과한 우리가, 일본이라든지 중국과 같은 대국의 역할에 대응하면서 세계적인 중심 국가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한미 관계의 동맹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참여정부에서도 근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국방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토의에 참석하게 되는데, 마지막 결론은 이 상황에서 한미 동맹의 기본정신을 존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으로 끝납니다. 처음 시작해서 각론에서는 여러 가지 대안이 많이 나왔지만 결국 회의를 끝날 때, 우리 대통령 말씀은 한미 동맹관계로 귀착이 됩니다.

이렇게 볼 때 한미 동맹은 국가의 안보뿐만 아니라 국가의 생존과 번영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바, 앞으

로도 한미 동맹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실무를 해보니까 한미 동맹 관계에 있어서 이것이 국방부의 역할이냐, 외교부의 역할이냐, 이것을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 저는 럼스펠드 미 국방부 장관하고도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외교부도 국방부 펜타곤이 한미 동맹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하는 것에 예민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3만 명이 넘는 주한 미군이 있기 때문에 아마 펜타콘의 발언이 외교부보다도 좀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이며, 영향력이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 외교부하고 국방부하고 업무가 서로 평행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중복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 National Security Council)에서 잘 조정되어 갑니다.

미국 입장에서 주한 미군 재배치나 감축 논의는 미국의 국익이 바탕이 됨

최근 주한미군 재배치와 같은 일부 변화를 두고 한미 동맹이 약화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미국의 주한미군의 감축 및 재배치는 미국의 세계 전략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미국의 국익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맡기는 힘든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또 우리의 국익도 있으니까 이런 동맹관계의 틀 속에서 양국의 국익 또는 군사적 이익에 의해서 협의하고 토의하고 합의해 가는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어떤 큰 파열음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아직은 정확한 진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9.11 테러 이후 세계 전략을 근본적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부시 앳 워(Bush at War)라는 책에 보면 9.11을 부시가 전쟁으로 규정하죠. 공보참모들이 절대 전쟁이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된다고 두 시간 이상 부시를 설득했지만 결국 부시는 '전쟁(war)'이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지났습니다만, 너희 나라는 지금 전쟁 중에 있지 않느냐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

들이 가장 설득력 있게 우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해외주둔미군 재배치 계획(GPR : Global Posture Review)을 통해 소위 초일류 군사대국으로서 세계의 군사 배치를 조정하고 있는데 미국은 합동전력사령부에서 한 3천여 명이 모여서 앞으로의 전쟁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합니다. 제가 작년에 거기에 가서 여기 일본 사람들이 와 있느냐고 물어보았더니 일본 자위대도 참모들이 와서 참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근 1년 가까이 노력을 해서 곧 한국에서 장교 3명이 거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변하고 있는 군사의 여러 가지의 수행개념을 접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있어서 용산 기지의 재배치라든지 2사단 또는 연합토지관리계획(LPP : Land Partnership Plan)에 대해서는 언론에 소개된 바 있기 때문에 다 아시는 것이라 믿고 시간 관계상 넘어 가겠습니다.

또 주한미군 감축도 예정대로 2008년까지는 12,500명을 감축할 계획이지만, 아울러서 1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1조 정도를 군사력 보강에 투자하기 때문에 병력은 줄어도 전투력은 더 증강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정부에서 협력적 자주국방이라든지 국방 개혁을 이야기하게 된 배경에도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② 미래 지향적 발전 방향

한미 동맹의 미래 지향적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국민들의 안보 의

현 한미 동맹 관계의 특색 중 하나는 '서로 따질 것은 따지자'임

식이 변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한미 동맹관계의 미래 지향적 발전에 대한 기대 요구가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참여정부의 한미 동맹 관계에 있어서 하나의 특색은 '서로 따질 것은 따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슈가 있으면 전에는 미국의 주장을 우리가 가능한 수용하는 입장이었지만 지금은 한번 따져보자는 거지요. 서로 국익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서로 합의할 점이 있으면 합의하고 그렇지 못한 점은 계속해서 토의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제가 국방부에 들어오기 전에 미국 측으로부터 들었던 많은 내용이 한국 국방부하고 팬타곤 간에 의사소통이 너무 없으니 접촉을 자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차관보 급에서는 최소한 2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매 한 달에 한번씩 미국 측과 만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현안 문제는 그렇게 조직되어 나갑니다.

과거 FOTA 회의와 현 SPI에서 한미간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음

그래서 한국 측에서 12차에 걸친 한미 미래동맹 정책구상회의(FOTA : The Future of the ROK-U.S Alliance Policy Initiative ; 이하 FOTA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FOTA 회의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 이야기할 것이 있어 향후에도 FOTA 회의 수준으로 회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에서 만나서 다른 회의로 바꾸자 해서 바꾼 것이 한미 안보정책 구상회의(SPI : Security Policy Initiative ; 이하 SPI) 입니다. 이것은 이전의 FOTA 회의와 같은 연장선에서 움직입니다. 지금까지 SPI 3차 회의가 끝났고 4차는 8월에 한국에서 하게 됩니다. SPI에서 앞으로 남아있는 계속 진행해야 될 몇 가지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미래 한미 동맹 비전에 대한 연구를 위주로 하되, 미래 한미 동맹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할 때 가장 재미있는 부분이 동북아의 안보 상황 평가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본과 중국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시각,

북한 핵 문제 등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서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용산 기지 이전에 대한 주한 미군 재배치 관련 후속조치 사항, 10대 군사 임무 전환, 연합 작전 능력 발전 등 그동안 합의사항 이행 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합의하고 토의하는 주체는 외교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가끔 질문을 받지만 주무 부처가 외교부입니다. 앞으로 SPI가 매 2개월마다 진전되면서 중요한 이슈는 저희들이 국민들에게 알린다는 차원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게 됩니다. 단, 최근에 미국 측에서 언론에 공개한 대로 진행되는 사항에 있어서는 언론에 미리 공개하는 것이 어렵다는 건전한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언론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저희들이 공식적인 브리핑을 하기 전에는 이런 점도 잘 참작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몇 백 년 전부터 내려오는 언론의 속성을 저는 존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대로 노력을 하고 언론에서도 이것을 좀 이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SPI 회의시 세 가지 주된 고려사항은 대북 전쟁 억제력 강화, 변화하는 미래 안보 상황 점검, 한국군 능력 확대임

SPI 회의에는 세 가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대북 전쟁 억제력 강화, 둘째, 변화하는 미래 안보 상황, 셋째, 점차 신장되는 우리의 국력에 걸맞는 한국군 능력의 확대가 그것입니다. 미국도 우리의 협력적 자주국방에 대해서는 100% 지지합니다. 왜 지지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방력의 강화, 한반도에 있어서의 북한의 군사력을 초월하는 그런 군사력의 발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군사변환 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한국군과의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지휘관계입니다. 자주국방의 추진도 중요하지만 이 한미 지휘관계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논의되는 과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자주국방을 추진하면서 현실적으로 한미 군사동맹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한미 동맹과 자위적 방위 역량의 강화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자주국방을 추진하면서 현실적으로 한미 군사동맹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협력적 자주국방이라는 조어가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면 한반도에 있어서 군사적 안정의 유지는 한국군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고 그리고 주변국하고 불특정 위협에 대비한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미 동맹에 당분간 의존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중국이나 일본과 외교, 그리고 국민적 감정이 대립되는 사안이 생길 때 우리가 그런 나라에 대해서 일관되게 다소 강한 톤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한미 동맹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2010년에는 우리가 국방비를 이렇게 계속 투자해 갈 때 북한의 군사력을 특수무기를 제외하고는 충분히 제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 국방 개혁 추이

국방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될 때마다 나온 것이 '통합군제'임

다음에 국방 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국방 개혁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1980년 후반기부터 우리 군의 구조라든지 운영 방침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될 때마다 제기된 것이었고, 가장 많이 나온 의견이 '통합군제'였습니다. 이 통합군을 생각하다보니 군 구조 전체를 바꿔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20년 정확히 말해서 16~17년 동안 많은 의견들이 대두되었습니다. 지금 군 수뇌부에 계신 분들도 이런 작업에 많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모아서 일관되게 유지해보자는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많은 기업 과제가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에 이것이 실패한 원인은 5년간의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고 나니까 자꾸 중단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법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법으로 만들어 놓으면 정부가 바뀌어도 그것이 어떤 구속력이 있으니까 계속 나갈 게 아닌가, 그런 아이디어가 프랑스에서 대통령께서 접한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우리도 그런 것을 생각해 봤지요. 그러나 법을 만드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었기 때문에 법을 만드는데 까지는 나가지 않았죠. 단지 1990년대 국방조직법을 바꿨는데, 그때 제가 깊숙이 참여했습니다만, 국방조직법을…, 국군조직법이죠. 그때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통합군제의 핵심은 통합군 사령관의 신설 여부이며, 한국군은 합참의장에게 3군 작전권을 부여

한 가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그때 가장 핵심이 되었던 것이 통합군 사령관을 두느냐, 안 두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아주 가공할 만한 법을 만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1960년대에 하나의 유행병처럼 다가왔던 통합군에 대한 연구를 제일 먼저 시작한 캐나다는 단일군체제를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 검토에 들어간 나라는 영국입니다. 영국군은 통합군제를 채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그 당시 영국 국방부 장관 해즐턴은 '대영제국의 육·해·공군은 각 군의 명예를 위해서 싸우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놔두어야겠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1980년 중반에 합참 조직에 큰 변화가 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에서 가장 논란이 있었던 이론이 1776년 버지니아 장전에서 미국의 헌법정신을 이야기할 때 유니폼을 입은 단일의 군인에게 육·해·공군의 작전지휘권을 주는 것은 미 헌법정신에 위반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미 합참의장에게 상당한 권한은 주었지만 작전 지휘권만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합참의장에게 3군의 작전 지휘권을 주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 당시에 상당히 용감하게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그때 미국 사람이 와서 저보고 어떻게 이 법이 너희 국회에

서 통과가 되었느냐, 그러한 질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합참의장은 상당히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합참의장보다는 다른 면에서 권한이 적어요. 미 국회에서는 미국 합참의장에게 작전 지휘권을 주지 않는 대신에 인사권이나 대통령에 대한 자문역할을 상당히 강화시켜 놓았기 때문이죠. 실질적으로 미 합참의장은 작전 지휘관 같은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하튼간에 저희들이 이런 문제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국방 개혁을 할 때는 과거에 나왔던 여러 가지 이론과, 또 이론의 부산물을 통합해서 이번 연말까지는 입법안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과거에서부터 있었던 의견을 쭉 종합하는 차원이고 조금 더 획기적인 아이디어 몇 가지가 들어갈 것입니다.

국방에 관한 자문이나 의사 결정 체제에 민간 전문가의 참여가 계속 확대되고 있음

제가 국방부를 맡으면서 느꼈던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방부가 그 동안 폐쇄성이 높았는데 참여정부에 들어서는 민간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민간 학자나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하다 보니까 그 동안 국방부에서 폐쇄적으로 유지해왔던 각종 분석, 평가 등에 대한 타당성이 지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가장 큰 사건이 작년 연말에 있었던 소위 남북 군사력의 비교였습니다. 우리 합참이 정부 중심으로 했는데 이제 민간 관료들이 참가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견이 생겼습니다. 조금 쉽게 이야기하다보면 군인들은 세계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적의 위험요소를 가능한 크게 평가합니다. 그래야 예산 획득이 좀 쉬워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하나의 변화였고,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기 때문에 국방에 관한 자문이나 의사 결정 체제에 대한 민간 참여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 향후 세 가지 과제

군의 3대 과제는 군에 대한 불신 해소, 지휘 상황의 대국민 공개, 국방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 확보임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 국방부가 안고 있는 세 가지 중요한 과제, 딜레마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오늘 모든 말씀을 끝내려고 합니다.

첫째, 과거 우리 군은 한 30년 동안 일부 정치군인들이 정치에 참여한 과오가 국민들에게 공개되는 과정에서부터 굉장히 불신을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군 현역들이 그 짐을 어깨에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부, 사회 각계 엘리트들과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문제가 그것이기 때문에 우린 군은 군에 대한 불신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거사 조사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것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정보화 시대, 첨단과학 시대에서 군의 지휘 관리는 반드시 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 지휘관이 부대를 지휘하는 모든 사항이 실시간으로 국민들에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병사들이 다 핸드폰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가족들에게 전해지게 되면 가족들은 자기 나름대로 언론이나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기 때문에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의 군의 지휘관의 투명성과 책임성 이런 것들이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휘관이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셋째, 우리 군이 아주 잘 해 와서 남북관계의 휴전체제 하에서 평화를 잘 유지해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군의 역할과 국방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역할에서 점차 멀어지고 또 잊어버리게 되는 현상들이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총론적으로는 국방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우리 동네에 있는 사격장이 시끄러우니까 나가라고 하죠. 비행장 시끄러우니까 나라가고 하죠. 광주에 있는 미국 패트리어트 부대 나가라고

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들이 학생들 보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는데 방에서 공부하면 시끄럽다고 나가서 하라고 하는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국방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정말 어느 표준적인 수준에서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딜레마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좁은 국토에서 군이 있어야 되면 훈련장과 비행장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국민 전체가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군사시설이 있는 지역에 국민전체의 부담에서 보상해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자리를 옮기라고 하는 것은 힘듭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는 여러 가지 해왔습니다만 여기서 마치고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더 듣는 그런 기회가 되면 시간을 절약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

(백종천 세종연구소 소장) 장관님께서 많은 주제를 말씀하셨는데 군 개혁에 대해서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장관님의 질문 겸 의견을 제가 묻겠습니다.

최근 군의 통합성이 약화된 것이 아닌가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8.18 계획이라는 게 80년도 후반에 연구되었는데 그때 우리 장관님께서 실무자로 연구에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3군이 갖았던 육·해·공 3군 지휘 체계가 합동군제로 바뀌면서 합참의장제가 생긴 것입니다. 바로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던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합동군제로 개편한 것만 해도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방백서 등에는 통합 전력의 극대화를 위한 군 개혁의 기본 모델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취임하고

난 다음 처음으로 공개한 국방부에 공개문서에도 보면 통합전력, 군의 통합성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통합성, 통합전력이 약화된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좀 두렵습니다. 다시 통합성으로 가야 됩니다. 군 구조를 바꾸기가 더 어려운 일본도 2004년도 백서를 보면 최소한 30 페이지 정도를 할애해서 군사력의 통합성, 통합전력의 확대를 위해 바꾸기 어려운 군 구조를 바꾸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15~16년 전에 했던 합동군제와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일본이 그만큼 간다는 것은 대단하다고 봅니다.

합동군제로 개편한 이후에도 국방 개혁의 과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합동군제로 개편한 이후에도 국방 개혁의 과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년 국방 개혁의 과제로 제시했던 사항은 통합군제가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법으로 규정한다면,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10년을 내다보고 법을 만든다고 하면, 진짜 한국군이 그동안 15~16년 동안 합동군제를 채택함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국방 개혁의 핵심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핵심인 통합군이라고 하면 헌법에 어긋난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통합군이라는 말 안 쓰는데 통합군형 군부제라고 합시다. 통합군제로 가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아까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보화 잘 돼있죠, 무기 체계 잘 돼있죠, 3군이 통합적으로 전력을 발휘해야 전쟁을 엄청나게 잘 할 수 있는 기술이 벌써 발달이 되어 있고, 한국군도 그동안 투자액이 상당하다는 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제가 볼 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합동군제의 문제점은 예산입니다. 많은 무기를 사려고 하면 돈이 엄청나게 필요할 게 아닙니까? 아까 장관님이 우리 국민들이 세금내야 한다고 했는데 저는 거기에 100% 찬성입니다. 그러나 엄청나게 발달된 첨단 무기를 사려면 세금으로 해결

이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군이 가지고 있는 분야 중에서 군 구조를 보다 슬림화하고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볼 때는 합동군제입니다.

예를 듭시다. 지금 3군이 전부다 교육기관인 사관학교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3군 사관학교 사관생도 다 합쳐봤자 3천 명이 안돼요. 그런데 불구하고 대한민국 캠퍼스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엄청나게 좋은 교수들이 있거든요. 그것 제가 볼 때 잘만 통합해서 한다고 하면 더 좋은 교육, 더 좋은 사관학교, 더 통합성을 지키는 그런 마인드를 지키는 학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투력을 최대로 발휘하는 통합전력으로 구축하려면 육·해·공군이 전력의 통합을 보다 더 지향해야 함

다음에 두 번째는 군의 궁극적인 목적은 전투력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군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앞으로 잠재적인 형태의 위협이 북쪽에서 주변에서 어디서 오든지 간에 그것을 이기는 것이 우리 군사력인데 군사력을 앞으로 최대로 발휘하는 통합전력을 구축하려면 육・해・공군이 전력의 통합을 지금보다 더 지향해야 합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어느 정도 잘 되어 있어요. 작전 면에서는 합참의장제도가 있어 잘 되고 있는데, 제도가 바뀌면 더 잘 될 것 같아요. 합참의장은 인사권이 없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요. 우리 군의 문제, 합동 통합군제와 제약된 예산에서의 전력 확충, 이 두 가지 문제는 군 구조를 변화시킴으로 해서 달성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경비를 절약할 수 있고, 비용을 줄이고 그 비용 줄이는 것으로 더 좋은 무기를 사자는 얘기입니다.

각 군의 전문성 및 특성 유지는 통합군제 하에서도 얼마든지 유지 가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투를 지금 보다 더 발전시키려면 3군의 병기 합동군제를 통합군제로 바꾸고 일사불란한 지휘 체계를 세워야 하는데, 1980년대 1990년대에는 왜 통합군제를 안 했느냐, 장관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군사적인 문제라면 통

합군제로 가야 한다고 이 사람들이 다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안 했느냐? 과도한 권한 집중, 문민통제 원칙, 각 군의 전문성 및 특성 유지, 국민의 공감대 형성 등을 고려했을 때 합동군제가 우리 실정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죠. 이 네 가지 중 과도한 집중, 문민통제, 국민의 공감대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또 쿠데타 할까 봐 그 당시 말썽이 생겼어요. 그 당시만 해도 군사정부가 끝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았겠어요. 국회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이 세 가지 때문에 또 군대가 정치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안 된다고 해서 굉장히 명분을 얻었고 저는 그 명분이 그 당시에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각 군의 전문성 및 특성 유지는 통합군제 하에서도 얼마든지 유지가 됩니다. 오히려 더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군은 완전한 통합군제인 태평양 사령부를 모델로 삼았어야 했음

마지막으로 사실 전통이 깊은 나라는 통합군제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국군 편제는 미군 것을 그대로 가져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잘못 가져온 것입니다. 당시 미군 체제가 아니라 그 중 하나에 속해있는 미국 태평양 사령부의 편제 체제를 가져왔어야 했습니다. 태평양 사령부는 지금 완전한 통합군제예요. 태평양 총 사령관 해군 출신 밑에 각 군 3개 군이 들어가서 얼마나 잘 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군이 태평양 사령부를 모델로 받아들였다면 지금 이런 것을 안 하고 많은 경비를 절약해서 지금 매우 좋은 군대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속한 군대를 육성하기 위해 통합성을 지행해야 하며, 통합적인 사관학교 교육이 필요함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모든 국가가 군 구조는 확실하게 통합군제로 못 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전투력의 향상을 위해서 엄청난 기술과 자금과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 다음이 신속한 군대입니다. 이를 위해서 통합성을 지향하는 군대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입니다. 처음부터 일본은 사관학교가 통합 사관학교였어요. 일본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겉으로는 미국의 압

력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언젠가는 그래도 미래를 지배하는 정신적인 교육을 많이 했던 게 아닌가 합니다. 반면 지금 우리 군의 내부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가 육·해·공군의 부처 이기주의, 육·해·공군의 갈등, 육·해·공군의 반목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대한민국 군대 개혁의 큰 걸림돌이고 큰 병폐입니다. 그래서 저는 법제화 이전에 빠른 시일 내에 통합적인 사관학교 교육으로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합참의장에게 작전지휘권과 인사권을 모두 주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음

(윤광웅 국방부 장관) 현 정부에서는 한 명의 군인에게 작전 지휘권과 인사권을 다 주는 것을 현재로서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대통령과 장관에게까지만 주어집니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대, 1970년대 초반으로 제가 기억합니다만, 그 때 통합군제를 만들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에게 결재까지 갔는데 시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정치권에서 박대통령에게 한 명의 군인에게 작전지휘권과 인사권을 주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강조했었습니다. 그래서 실행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백 소장님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합참의장의 권한에 대해서는 이대로 이 정도의 법적 지위를 주고 그 밑에 기능들을 통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많을 것입니다만 일본이 방위대학으로 통합한 것은 2차 대전의 책임을 육군 사관학교와 해군 사관학교의 출신자들에게 많이 지웠지요. 그 당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어느 학자가 정치가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책이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일본의 앞날을 위해서는 사관학교의 교육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합참 의장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우리나라는 합참의장의 권한에 대한 연구가 좀 있어야

합참의장은 3군에 대해서 중립성을 지킬 수 있어야 함

된다고 봅니다. 지금도 합참의장에게 작전지휘권을 부여하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갈수록 우리 후배들이 합참의장이라는 지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소개하죠. 미국 최초의 합참의장인 오마하 브레들리의 일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아이젠하워라든지 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백악관에서 이 역할을 했지만 법적으로 이 조직의 타이틀이 생기고 나서는 오마하 브레들리가 처음이었습니다. 이 분이 합참의장을 할 때 그 참모들의 관찰기를 보면 그가 합참의장으로서 코멘트를 할 때 육·해·공군의 어느 군 의견에 동의하는 것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중립을 지켰습니다. 앞으로 제가 볼 때는 합참의장은 3군에 대해서 중립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예를 들면 참 재미있죠. 국방부에서 군무 회의를 하면 모든 사람이 육군 참모총장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래요. 장관도 그렇게 하고 합참의장도 그렇게 하고 육군 참모총장님의 의견이 맞습니다. 이것이 통합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합참의장은 통합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3군에 대한 작전 지휘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공군사령관 보고 '너 비행기 몇 대 해서 어느 타켓트를 공격해라, 해군은 2함대에 있는 세력을 1함대로 보내라' 이러한 명령이 가능해요. 단지 밑에 지휘관들의 마인드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기관이라든지 연구기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능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방부 장관의 문민화를 통해서 통합성과 합동성을 이루도록 해야 함

마지막으로 제가 문민화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만 대충 문민화에 대해서는 보는 각도가 여러 가지이지만 이렇게 보면 가장 쉬울 것입니다. 각 군단에 갈등이 있을 때 그것을 조정, 통제하는 데에서 문민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장관이 할 수 있다 이거죠. 뭐 대단히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국방부 장관의 군

인 출신들은 그것은 쭉 해왔기 때문에 업무 통제는 잘 될지 모르지만 문민화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군사력 건설 방향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방부 문민화가 됨으로써 아까 우리 백 교수님이 강조하는 통합성이라든지 합동성이 장관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제가 답변을 드리지요.

최근 북한의 유화 정책에 대한 경계가 필요함

(김인호 중소기업연구원 원장) 최근 북한에 유화정책이라고 그럴까, 북한이 좀 변하는 것 같은 것을 느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김정일이 뭐 부시를 각하라고 그랬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굉장히 유화적으로 나오고 이것을 참 좋은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언론과 정부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매우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공산주의인지 이제는 모르겠다고 하겠지만 위기에 몰리면 껴안는다는 것이 지금까지 공산주의의 기본적인 속성이었고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자들이 가장 위험하거나 가장 어려울 때에 민족을 찾지 않았습니까? 국공의 합작이라든가, 또 소련이 독일의 침공을 받아 위기에 몰리니까 스탈린이 슬라브 민족의 단결을 호소하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큰 함정에 빠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 한 가지는 북한이 진정으로 미국을 두려워하는 것을 나타내는 측면도 하나 있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한민족 공조를 주장함으로써 또 남한을 기만하는 것은 아닌가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국방장관님께서 답변하기 좀 어려운 질문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아까 미군 재배치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비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미국의 재배치는 미국

미군의 재배치 전략과 무관하게 한미간에 든든한 공조를 이루는 것이 필요함

의 세계 군사전략의 일환이고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한국의 어떤 반대의견에 관계없이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나갈 것입니다. 다만 한미관계에 있어서는 울고 싶던 차에 뺨 때려준다는 말처럼 한국이 미국으로 하여금 그런 것을 하기에 아주 적합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한 측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미국의 군사력 재배치나 전략적으로 유연한 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북한 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국이 전략적 유연성을 갖는다는 것은 북한에 대해서 엄청난 위험 요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미국이 전략적으로 유연하고 군사력 재배치를 하는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 한미간에 든든한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만약 든든한 공조가 이루어지고 우리 정부의 정책이 분명하게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 국민들의 인식이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다면 오히려 이것은 굉장히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불안을 느끼고 미국과의 갈등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문제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방부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남쪽과 북쪽이 다 전쟁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저는 전쟁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쪽이 우리보다는 북한이라고 봅니다. 전쟁이 나면 북한은 끝장이라는 것을 북한의 지도부가 너무나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에 대한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북한의 체제 변화를 유도해야 함

그런데 같이 전쟁을 두려워하는 남북이 그 전쟁에 대해서 대응하는 태도는 정 반대예요. 북한은 예를 들어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핵을 보유하겠다, 이렇게 해서 정말 벼랑 끝 전술로 나오는데 대해서 남쪽은 북쪽이 전쟁만 안 일으켜 준다면 우리는 어떤 일도 하겠다, 어떤 불편도,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희생도 지원도 감수하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경

제력은, 어떻게 보시는가 모르지만, 일단 국민소득 300불 내외 정도입니다. 그런 경제력을 가진 나라가 어떻게 저런 군사력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군사적으로나 전쟁이나 남북관계에 대한 힘의 우위에 바탕을 두고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 원칙을 고수하면서 저 사람들을 힘을 통해서 이쪽으로 오도록 유도하는 일 이외에 무슨 대안이 있겠습니까? 과거 미소 대결에서 미국이 설득시키고 화해하고 온정주의를 바탕으로 한 협상을 통해 소련이 굴복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군사적 열세와 경제적 시스템의 실패로 소련 스스로가 붕괴하게 된 것이지 미국이 협상을 해서 소련이 붕괴된 것이 아니란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평화를 원치 않는 사람은 없겠지만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너무나 흔한 격언을 상기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책에 대해서 좀 반성을 해야 될 점은 없는가, 이런 질문을 드려 봅니다.

주한미군의 역할은 한반도의 안보나 군사적 안정으로 두고, 주변국 갈등에 대해서는 우리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오승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아까 장관님 말씀하시면서 제가 정확히 이해를 했나 모르겠습니다만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대해서 외교부가 주도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는 협력적 자주국방을 설명하시면서 한반도의 안정 유지 문제는 한국이 주도로 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고 주변국과의 갈등에 대비해서는 미군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협력적 자주국방의 틀이라고 설명 하신 것 같습니다. 협력적 자주국방의 방침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만 문제,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문제가 첨예한데, 만약에 주변국과의 갈등에 대비해서 주한 미군을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면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것이 중국과의 갈등을 야기할 굉장히 위험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본다면 주한 미군의 역할은 한

반도의 안보나 군사적 안정을 위해서 적극 활용하고 주변국 갈등에 대비해서는 우리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영내 안보와 평화를 위해서 보다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군 복무기간을 1년 6개월 정도로 단축하는 것은 불가능한가

(장달중 서울대학교 교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복무기간 단축입니다. 저보다 5~6년 선배님들은 아마 빵빵 군번이라고 해서 군 복무기간이 1년 6개월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 어려운 시기에 다 1년 6개월씩 군대를 다녔는데 요새 그것이 안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국방부에 자문위원을 할 때 여러 번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절대 안 된다고 하더니 대통령이 말 한마디 하니까 갑자기 2개월이 줄어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장관님께서 언론에 보도된 게 정확하게 보도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장관님께서 군대도 동북아 균형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2, 제3의 김일병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 획기적인 내무반 개선 방안이 필요하지 않은가

(남성욱 고려대학교 교수) 앞으로 제2, 제3의 김일병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를 하게 됩니다. 물론 60만 군대에서 내무반 사고는 불가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그것은 과거 군대에서는 모르지만 신세대 군대에서는 가능치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무반 개선방안을 획기적으로 내놓으실 방안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김일병 사건 대책으로서 2008년 사병 월급을 몇 만원으로 올린다는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사병 월급을 미국 수준으로 200만 원으로 올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병월급은 올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 돈으로 군부대 내무반을

개선하는 방안을 장관님께서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고유환 동국대학교 교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은 이해하지만 동북아 주변지역의 분쟁에 주한 미군이 개입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사시 한반도에 추가적으로 투입되는 미군들은 전략적 유연성으로 이해하는 반면, 한반도에서 미군 병력이 나가는 것은 안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부의 그런 모순적인 입장을 미국 측에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방백서에서 주적 개념을 삭제함으로써 앞으로 군사 전략을 짜는 데 문제점은 없는가

(이춘근 자유기업원 부원장) 아직까지 나온 질문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크기가 좀 작은 질문 같은데 저는 좀 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방부가 주적 개념을 없애고 몇 년 만에 주적이라는 개념을 표현하지 않은 국방백서를 발간했는데 도덕적인 문제라든가 외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주적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군사 전략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다릅니다. 주적이 없을 경우에 군사 전략을 제대로 짤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대가 이 세계의 모든 군사력과 대항할 수도 없고,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강대국과 대항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의 군사능력을 한정하는 의미에서 주적 개념을 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주적 개념을 없앴다는 것은 앞으로 군사 전략을 짜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방백서에는 그래도 북한이 여전히 주적인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럴 경우에 주적이라는 용어를 없앰으로써 얻는 이득도 없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하여 주한 미군의 역할은 한반도 전쟁 억제가 우선임

(윤광웅 국방부 장관) 먼저 전략적 유연성의 문제에 대해 또 혼돈이 생기면 안 되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 한국의 국방력은 한반도에 있어서의 대북 위주의 안정이라든지 소위 전쟁을 억제하는데 역할을 많이 담당하고, 주한 미군은 우선적으로 한반도의 전쟁을 억제하는데 그 역할이 있다는 원칙은 저희들이 켜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한다면 동북아의 평화를 유지하는데 주한 미군의 역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대통령께서는 여러 번 강조를 하셨는데, 국민이 원치 않는 전쟁에 우리는 절대로 개입하지 않겠다, 말려들어가는 일이 없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입니다. 이 문제는 이제 외교부에서 계속해서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국방 정책은 정치외교 쪽에 대해서는 조금 종속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치외교적으로 나라의 어떤 외교정책이 정해지면 국방은 그 역할의 범위 안에서 그것을 집행해 나가야 되죠. 그러다가 보니 정부가 균형자론을 이야기하면 국방도 집행할 수 있는 능력 범위 내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국방을 강화해서 균형자 역할을 더 강화시켜나간다는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정부에서 방침을 발표하면 각 부처마다 그것을 지원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해석하셔야 하고, 소위 군사적으로 균형자 역할을 이해하시는 것은 무리한 해석입니다.

국민이 원치 않는 전쟁에 절대로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이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임

북한의 유화정책에 대해 군사적인 위험 요소를 파악, 과감히 대처하는 것이 필요함

김인호 원장님께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그 어떤 심리전이라든지 어떤 정치적 외교적 공세가 함축하고 있는 문제에 있어서 군사적으로 위험한 요소가 있으면 과감히 거기에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정보수집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북한이 민족 공조를 어떤 경우에 쓰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함

정에 말려 들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군사적으로나 정치 외교적으로 우리가 남북교류라든지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또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적절히 선택적으로 해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별도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군사적으로는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재배치 개념은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이 소위 이념대결에 있어서의 어떤 대치국면으로서 군사력을 배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은 최근 세계 도처에서 테러의 위협이 있으니까 미군을 세계적으로 편리한 곳에 놔두고 위협이 있는 곳에 작전을 전개하는 움직이는 군대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 문제는 미국의 국익을 위한 것이니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남북 간의 대치문제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소위 국방 전문가들이 서구라든지 미국에 하고 있는 군사전략에 너무 기울어져서 한반도도 그런 틀로 이끌어 가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것이지요. 한반도에 있어서 군사적 대책은 냉전 시대와 같은 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100만에 가까운 지상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유연성에 있어서 유입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미국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한반도에 전쟁이 나게 되면 세계 도처에 있는 미군이 이내 들어온다 이거지요. 이것도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것입니다. 나가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들어오는 것도 생각하라는 것이지요.

복무기간 단축은 국가 경제나 출생률 등을 고려해 조정해 나갈 것

복무기간 단축문제는 저희들이 병력자원에 관한 문제하고도 많은 연관이 되고, 또 사회적으로 젊은이들이 필요한 그런 분야가 많기 때문에 이제 단축을 시키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정보와 첨단화 시대에 있어서 젊은이들의 학습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독일이나 불란서 같은 경우에는 12

개월 내지 14개월 단축을 시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단축을 해 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현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 간에 모병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공군의 경우 28개월 했다가 1개월 단축했습니다. 왜냐하면 공군 복무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서 입대를 안 하기 때문에 1개월을 단축시켜 모병하는데 균형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향후 복무기간은 국가 경제나 출생률 등을 면밀히 고려하면서 조정해 나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병들 봉급을 왜 8만원 주느냐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정부의 대선 공약입니다. 2008년까지 8만원으로 올리는 것, 그래서 이번에 사건이 나고 나니까 1년을 앞당기자 해서 당정 협의회에서 2007년까지 8만원을 주는 것으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군대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사병병력문화개선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시민들의 참여 또한 요구됨

김일병 사건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군대 문화하고 상당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문화적인, 사회적인 현상에서 해석하고, 이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정부차원으로 '사병병력문화개선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7월 말이나 8월 초에 계획을 세우고 한 2~3개월 걸리면 대책이 나올 예정인데, 문제는 전 국민이 참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에서부터, 혹은 사회에서부터 폭력, 욕설, 이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제거되어야만 군 병영생활도 개선되는 것이지요. 얼마 전 백선엽 장군을 만나 뵈었는데 아주 전형적인 일본 군대의 문화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중국 사람은 얼굴을 잘 안 때린답니다. 중국 사람들은 체면을 아주 중시하기 때문이지요. 그 대신 가슴을 때린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신체 부위에 관계없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일본 병영 문화의 잔존입니다. 우리 지상군이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잔재는 프러시아에서 일본 육군을 통해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것들을 제거해 나가야 합니다. 국민개병제도 하에서 사병들의 병영 생활을 어떻게 개선하느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적 개념에 관해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국

남북관계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주적 개념 보다는 군사적 위협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함

방부에 와서 이것을 쭉 보니까 개념적인 문제와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어요. 개념적인 문제는 우리 이춘근 박사님께서도 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주적이 한국에 들어오면 다 잡아야지요. 그런데 군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주적 개념과 함께 정상회담, 장관급 회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을 생각할 때 혼란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군사적 위협으로 표시하는 것이 머리 좋은 젊은 병사들이 이해하기에 빠르다는 것입니다. 군사적 위협이라고 했을 때는 그 나라 사람들이 와도, 소위 경제 교류와 문화적 교류를 하러 와도 안 잡아넣지 않습니까? 주적이라면 어떻게 되었든 간에 다 잡아넣어야지요. 그래서 소위 정치와 외교 군사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도록 정리를 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990년대 중반 북핵 문제가 발단이 되어 주적 개념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음

절차상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국방백서에 주적이라는 개념이 왜 들어갔느냐, 1990년 중반에 북한 핵문제가 나오니까 국방부에 있는 정책 입안자들이 주적이라고 집어넣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외교부나 통일부나 대통령이나 안보상 토의 과정도 없었어요.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이 점은 간단한 것 같지만 저는 아주 크게 봅니다. 무력을 행사하는 국방부의 정책위반자가 어느 나라를 주적이라고 집어넣는 것은 엄청난 과오다 이렇게 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점은 여러분도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우리 실무자에게 교육을 시켰어요. 이와 같이 중대한 단어를 쓸 때는 국가적으로 합의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도 그 당시에 아무 말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북한이 핵을 개발한다고 했으니까요. 아무튼 이런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나라에 대해 우리가 군사적 위협을 할 때는 국가에서 토의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제가 답변을 다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쟁을 보는 시각은

좀 냉철해야 합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얻는 이익보다도 전쟁을 해서 잃는 이익이 더 크면 전쟁을 방지해야지요. 지금 남북관계를 그렇게 보는 게 아닙니까? 지금 전쟁이 났을 때 한국이 입을 수 있는 피해가 지금 남북관계에서 인내함으로 얻는 피해보다 훨씬 크겠죠. 그래서 전쟁을 방지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큰 목적입니다. 한국전 전쟁이 지난 지 거의 60년 가까이 되는데요. 물론 정확히 55년 됐지만 그 피해를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적인 부담이 지금 엄청납니다. 보상 문제, 갈등문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방을 튼튼히 해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참여정부 이후 대미외교를 통해 구체적으로 얻은 것은 무엇인가

(김용호 인하대학교 교수) 장관님께서는 참여정부의 대미 군사외교에서 가장 큰 특징이 따질 것은 따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행정부에서도 미국과의 군사 교섭에 대해서도 따질 것은 따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이승만 정부에서는 한미 방위협정을 만들기 위해서 이대통령이 조목조목 따져서 정말 공갈 협박을 할 정도로 해서 이 방위협정을 만든 것 같습니다. 정도의 차이고 따질 것을 정말 따지고 있는지 따지지 않아야 될 것을 따지는지, 그리고 따져서 얻을 것이 있는 것을 따지는지 그렇지 않는지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관님께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따져서 구체적으로 얻은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왜곡된 시각을 가지지 않도록 설득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윤광웅 국방부 장관) 미국이 한국의 입장을 좀 더 많이 이해하고 경청하는 것이 따져서 얻은 것입니다. 방위비 분담 같은 것도 한국이 많이 따졌지요. 그래서 갈등도 있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마무리가 되어가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한국

미군 기지의 재배치, 방위비 분담 등에서 미국이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경청하게 되었음

도 성년이 되어서 이제는 좀 많은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미국도 우리 주장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얻은 것이라면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좀더 다른 각도에서 발전적으로 보는 것과, 경제적으로는 미군 재배치, 국내 기지의 재배치라든지 방위비 분담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더 지켜봐 주시고, 참여정부가 끝나고 나서 종합적으로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럼스펠드와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나눕니다. 이번에 싱가폴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럼스펠드의 협조를 구해서 원만히 진행되었습니다. 럼스펠드가 우리측 입장을 많이 이해해 주었습니다.

(이규진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소장)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오늘 현대경제연구원과 중앙일보가 준비한 네 번째 21세기 동북아미래포럼에 많이 참석해 주시고 열띤 토론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섯 번째 포럼은 통일부 장관이나 지금 주중대사 둘 중에 한 분을 모실 예정입니다. 역시 그 때도 많이들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셔서 좋은 토론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아침 시간에 일찍 나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윤광웅 장관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포럼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RI

정리 및 교열

홍순직 수석연구위원 (sjhong@hri.co.kr) ☎ 02-3669-4182

이상우 선임연구원 (leesw@hri.co.kr) ☎ 02-3669-4014